

주간 농업농촌동향

2014. 11. 3. Vol. 43

■ 농정이슈

쌀 변동직불금 4년 만에 지급될 전망 등

■ 정책브리핑

2014/2015 동계작물 생산 확대 지원

■ 연구지원

2014년 가을배추·무 재배면적

■ 현장여론

농업 보조금 활용 실태 및 개선 방안

농정이슈

국내 언론 동향

□ 쌀 변동직불금 4년 만에 지급될 전망

- [풍년으로 산지 쌀값 하락...쌀 변동직불금 지급] 올해 산지 쌀값 하락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,400억 원대 변동직불금*이 쌀 생산농가에 지급될 전망

※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[월보] 쌀관측 11월호(10.28.) 통해 수확기 햅쌀(80kg) 평균가격 16만 7,600원(전년(17만 5,280원)대비 4.4%↓) 가정해 환산한 쌀변동직불금 1,400억 원대로 추산

• (쌀 변동직불금) 수확기 평균 쌀값이 농식품부가 제시한 목표가격인 80kg당 18만 8천 원 이내로 내려가면 차액의 85%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14년 예산은 3,153억 원 책정

- (이유) 쌀 풍작으로 최근 산지 쌀값 하락하는 등 2012년 10월 이후 2년 만에 최저치

자료 : 경향신문·세계일보·파이낸셜뉴스(2014.10.29.) / KBS·YTN(2014.10.30.) / 경향신문·국민일보·서울경제·세계일보·아시아경제·아시아투데이·아주경제·연합뉴스·파이낸셜뉴스(2014.10.31.)

참고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쌀관측월보_「KREI 농업관측 2014년 11월호 수확기 속보」(2014.10.28.)

□ 쌀 양허표 수정안, WTO 회원국 대체로 높다는 반응

- [쌀 양허표 수정안, WTO 회원국 대체로 높다는 반응] 농식품부 종합국감(10.27.)에서 장관, WTO 사무국에 쌀 양허표 수정안 제출 이후 회원국 반응에 대해 쌀 관세율 513%, WTO 회원국 대부분 높다는 지적

자료 : 이데일리(2014.10.27.) / 한국농업신문(2014.10.31.)

〈2015년부터 수입쌀 기준가 이하 급락 시 특별긴급관세 부과〉

- [기획재정부,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, 10.29.~12.8.] 2015년부터 수입쌀 가격 급락하면 특별긴급관세 부과
- (개정안) 쌀 가격이 1986~1988년 평균 수입가격 1kg당 146원보다 10% 넘게 떨어지면 30% 이상 특별긴급관세 부과, 세부적인 기준 가격은 추후 협의, 세율 30~90% 사이에서 결정

자료 : KBS(2014.10.29.) / YTN·아시아경제·연합뉴스·이투데이·한국경제(2014.10.30.)

참고 : 기획재정부 입법예고_「관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(2014.10.29.)

㉔ 농정이슈

□ 정부, 한·중 FTA 협상, 내실 기할 것

- [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한·중 FTA 협상, 내용에 충실] 국회 종합감사(10.27.)에서 △“APEC 정상회의 때 한·중 FTA 가서명 못할 것”, △“시한을 두지 않고 협상의 내실을 기할 것” 언급
- (중국) APEC 정상회의에서 한·중 FTA 타결 희망 ↔ (한국) 양국 FTA 연내 타결 위해 노력*
 - ※ 한·중 FTA의 조속한 타결보다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협상 유도
- [박대통령, 해외진출 촉진 위해 FTA 네트워크 지속 확대] 2015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(10.29.)에서 △“한·중·국·뉴질랜드·베트남 FTA 협상 빠른 시일 내 타결 적극 노력”, △“관세인하 통한 시장 선점효과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비준 동의안 처리해 주길” 언급

자료 : YTN(2014.10.27.) / news1·매일경제·머니투데이·연합뉴스·이데일리(2014.10.28.)

참고 : 청와대 뉴스_「2015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」(2014.10.29.)

〈제3차 한·중 통상협력협의회 개최〉

- [제3차 한·중 통상협력협의회 개최, 10.30., 베이징] 한·중 경제통상협력 수준 제고에 관한 MOU(2013.6.)에 근거하여 개최, 한·중 간 통상현안 등 점검
 - ※ (한국) 이상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, (중국) 천저우(陳洲) 상무부 아주시장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참석
- (주요 논의내용) △한·중 통상협력 현황 평가, △FTA 및 다자채널에서의 협력, △투자증진 방안, △비관세 장벽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 전개
 - ※ (한국측) △농식품, 화장품, 의약품 등 비관세장벽 해소 위한 중국측의 노력 촉구, △한국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중국정부 관심 촉구, △양국정상이 합의(2014.7.)한 새만금 “한·중 경험단지” 추진 위한 양국 실무차원 MOU체결 제안

자료 : news1·아시아경제·아시아투데이·아주경제·연합뉴스·파이낸셜뉴스(2014.10.31.)

참고 :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「제3차 한·중 통상협력협의회 개최 - 양국 간 통상, 투자 및 비관세 장벽 현안 논의 -」(2014.10.30.)

□ 호주 의회, 한·호주 FTA 이행법안 ‘조건부’로 통과

- [호주 의회, 한국과 투자자-국가소송제(ISD*) 재협상해야] 한·호주 FTA 통과 시키면서 협정 발효 뒤 한국 정부와 재협상 통해 ISD 조항 삭제·축소하라는 단서를 단 것으로 확인
 - ※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·정책으로 피해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

㉔ 농정이슈

- (호주 연방 상원 외교·국방·무역위원회 ISD에 많은 우려) ‘한·호주 FTA 검토 보고서’* 통해 “향후 한국과 재협상하여 ISD를 아예 빼거나 축소하고 부속서한 통해 공식화해야”, “향후 체결할 FTA에 ISD를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”고 제안
 - ※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ISD 재협상 촉구 결의안 성격을 가짐.

자료 : 경향신문(2014.10.29.)

□ TPP 협상 연내 최종 타결 가능성

- [TPP 협상 개최, 10.25.~27., 시드니] 앤드루 롭 호주 통상장관, TPP 협상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“결승선이 손에 닿는 거리에까지 왔다”며 호주 언론 보도(10.28.)
 - ※ “사흘간의 협상에서 시장 접근과 투자 원칙 분야에 대해 중대한 진전이 이뤄졌으며, 협정의 형태가 구체화하는 성과를 거뒀다”고 평가, “TPP 협상이 고비를 넘겼다”고 강조
- (TPP 연내 타결 불투명*) 롭 장관의 ‘중대한 진전’ 있었다는 낙관적 언급에도 불구하고, 연내 타결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
 - ※ 추계국 호주 롭 장관 및 다른 협상 참가국 장관들도 협상의 구체적 타결 시점 언급 회피

자료 : 서울경제·연합뉴스(2014.10.28.)

□ 돼지 구제역 백신 부작용 논란

- [돼지 구제역 백신 부작용, 백신 문제 제기] 박민수 의원, 농식품부 종합국감(10.27.)에서 대한한돈협회 자료 인용, 구제역 백신 접종한 돼지 도축할 때 발견되는 이상 증상이 농식품부가 주장한 접종방법의 문제라기보다 백신 자체 부작용이라고 주장
- (돼지 농장 3곳, 총 450마리 대상으로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발생 여부 조사 결과) (1개월 후) 도축한 돼지의 87%, (2개월3개월 후) 각각 80% 이상 증상
 - ※ 구제역 백신 이상육 평균 발생률(접종이전) 42% → (접종시작) (2011) 31.7% → (2014) 48%
- (정부입장) △한돈협회에서 실시한 실험은 최종결과(백신접종 4개월 후 도축 시 검사)가 아닌 중간실험결과(백신접종 1~3개월 후)로, 이상육 발생유무의 최종 판정은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도축출하 시점에서 파악되어야 하며, △백신 접종 후 생기는 물질이 농이 아닌 면역반응에 따른 염증인 만큼 부작용이 아니라는 입장

자료 : KBS·내일신문(2014.10.27.) / 아시아투데이·연합뉴스·이투데이·파이낸셜투데이(2014.10.28.)

참고 : 농식품부 설명자료_「“돼지고기 구제역 백신 부작용, 백신문제” (연합뉴스, 10.27) 보도 관련 설명」(2014.10.27.)

㉔ 농정이슈

〈전남 나주에서 의심증상 오리 살처분〉

- [나주시 산포면 한 오리농장, AI 의심증상 보여 1만 6,700여 마리 살처분, 10.29.] AI 발생(10.11.)한 산포면 농가(오리 5천 여 마리 살처분)와 3km 이내인 경계지역인 점 감안해 예방적 살처분, 전남 화순에서 일부 토종닭 고병원성 AI 확인
- (확산 방지 노력) 현재 AI 발생 경계지역 10km 이내 농가에 대해 오리 입식 전면 금지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에 행정력 집중

자료 : KBSYT(2014.10.29.) / 국민일보NEWSis:매일경제·서울파이낸스연합뉴스(2014.10.30.)

□ 농약 검출 수입 바나나 대량 유통

- [식품의약품안전처, 시중 유통 중인 수입 바나나(9개사 21건) 수거검사, 10.22~26.] 최초 정밀검사 시 문제없이 이후 수입분에 대해 관능검사(성질·상태·맛·냄새·색표시 등만 살피는 것)만 실시, 유통·소비단계에서 수거 검사 결과, 3개 업체 7건 부적합, 회수(4건)·압류*(3건)조치
- (잔류 농약 기준치 100배 달하는 바나나 700톤 유통) 9월 말부터 필리핀에서 수입한 바나나로 살균제 농약 ‘이프로디온’ 이 기준치 10~100배 이상 검출, 식약처, 수입 바나나의 안전성 확인될 때까지 향후 모든 수입 건 잔류농약 정밀검사 진행

※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전량 압류·폐기 처분 예정

자료 : KBSMBCYT(2014.10.27.) / SBS-국민일보·세계일보·이데일리(2014.10.28.) / 농민신문(2014.10.29.) / 농수축산신문(2014.10.31.)

참고 :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_「잔류농약 부적합 수입 바나나 회수압류 조치」(2014.10.27.)

□ 농식품부, 「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안」 국회 제출

- [농식품부, ‘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’ 제정안 국회 제출, 10.28.]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* 일환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위해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지원
- (주요 내용) △인증 이후 기준 미 충족 시 인증 취소인증표시 쓸 수 없고, △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거나 인증표시 무단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, △농식품부 장관, 5년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, △정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개설운영 지원, 사업자 교육 지원

※ △직거래 확대, △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, △수급관리 체계화, △도매시장 효율화(관계부처 합동, 2013.5.27.)

자료 : NEWSis:아시아투데이·아주경제·연합뉴스·이투데이(2014.10.28.) / 농민신문(2014.10.29.) / 농수축산신문·한국농업신문(2014.10.31.)

참고 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농식품부, 「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안」 국회 제출」(2014.10.28.)

㉔ 농정이슈

□ 그린카드로 저탄소인증농산물 구입 시 포인트 혜택

- [정부유통사·카드사*, 온실가스 감축과 농가소득 향상 위해 다자간 협약 체결, 10.31.] ‘저탄소 인증 농산물*’ 을 ‘그린카드’ 로 구매하면 구매액의 최대 9% 포인트로 지급

※ 농식품부, 환경부, 이마트, 롯데마트, 홈플러스, 올가홀푸드, BC카드

※※ 저탄소 농업기술 이용해 생산 전 과정에서 ‘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’임을 ‘인증’하는 제도

- (주요 내용) △저탄소 인증 농산물 판매 확대 통한 농가 소득향상과 온실가스 감축, △저탄소 소비생활 확산 위해 이마트·올가홀푸드 저탄소 인증 농산물 특별 판매 행사

자료 : 경향신문·머니투데이·아시아투데이·아주경제·연합뉴스·헤럴드경제(2014.11.1.)

참고 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정부·유통사·카드사, 식탁 위의 ‘착한’ 소비 바람 일으켜 -그린카드로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구입하면 ‘포인트’ 지급 -」(2014.10.31.)

□ 한국 농식품 중국 온라인시장 본격 진출

- [중국 알리바바*에 「한국 농식품 전용 판매장」 개설, 10.27.] △알리바바에서 판매하는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(기존) 13개 → (확대) 24, △판매 품목 (기존) 486개 품목(면류·음료류·과자류 등) → (확대) 872(마걸라·차류·쌀·가공품 등)

※ 중국 최대 B2B(기업간 거래) 온라인마켓으로 한국 농식품 판매를 확대키로 한 것은 박대통령의 농식품 수출확대 위한 정책적 의지 반영

자료 : 국민일보·아시아경제·아시아투데이·아주경제·파이낸셜뉴스(2014.10.27.) / 농민신문(2014.10.29.) / 농수축산신문·한국농업신문(2014.10.31.)

참고 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한국 농식품 중국 온라인시장 본격 진출 - 중국 최대 B2B 온라인 마켓 ‘알리바바’ 에 「한국 농식품 전용 판매장」 개설 -」(2014.10.26.)

□ 자투리 농지 규제 완화로 농촌경제 활성화 기대

- [농식품부 장관, 환경 밀레니엄포럼 참석, 10.30.] △농업진흥지역 내 자투리 농지 개발 규제 완화* 위해 전면 실태조사 중, 자투리 농지 일반농지로 전환 시 농촌 자립 기반 강화, 농가 소득 증대, △농촌집 마련 도시민 세금 혜택 검토, △젊은 농업인 이탈 방지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등

※ 농외소득이나 농촌의 6차산업화 활성화 위해 완화할 방침, 전국 농업진흥지역 총 80만여ha 중 자투리 농지는 약 3% 추정, 1%만 해도 여의도 면적(290ha)의 27배 토지가 풀려 농촌경제 활성화 기대

☞ 농정이슈

- (농식품부·한국농어촌공사,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실시, ~2015.상반기) 2005년 농지법 개정 앞두고 실태조사 이후 10여년 만, **자투리 농지 파악**할 계획
 - ※ 도로 철도 등이 들어서면서 우량농지와 분리된 농지를 말하며, 현행법상 농민이나 행정기관이 요청할 경우 1ha 이하 자투리 농지는 시도지사가, 2ha 이하 자투리 농지는 시도지사가 농식품부의 승인을 얻어 일반농지로 변경 가능

자료 : 연합뉴스·한국경제·헤럴드경제(2014.10.30.) / 한국경제(2014.10.31.)

참고 : 농식품부 해명자료_「“2ha이하 자투리농지 일반농지로 전환 추진”(연합뉴스, 10.29) “자투리 절대농지에 집·공장 짓는다”, “농지규제 확 풀어 농촌살리기. 전남충남·경북 ‘개발 열풍’ 기대”(한국경제(가판), 10.30) 기사 관련 해명」(2014.10.29.)

□ 2013년 연간진료비, 농어촌지역 상위권 차지

- [국민건강보험공단, 「2013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」 발간, 10.29.] 2013년 의료 보장 진료비 **56조 2,579억 원**(5년간 연평균 7.1%↑), 전년(53조 4,458억 원)대비 5.3%↑
- [의료보장(건강보험+의료급여) 인구 5천 1백만 명의 1인당 연간 진료비] 연간 약 109만 원 **노인층 많이 밀집한 농어촌지역이 평균진료비 상위 차지**, 시군구 지역 간 **최고 2.6배 차이** ⇒ ‘의료인프라 취약’ 농촌지역 공공의료 확충 필요
 - (지역별 상위) 전남 고흥군(1,974,340원) > 경남 의령군(1,973,404원) > 전북 부안군(1,925,191원) 순
 - (지역별 하위) 수원 영통구(761,590원) > 창원 성산구(833,609원) > 용인시 수지구(853,585원) 순

자료 : 경향신문·아주경제·연합뉴스·이데일리·한국경제TV(2014.10.30.)

참고 :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_「201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발간」(2014.10.29.)

☞ 정책브리핑

정책브리핑 2014/2015 동계작물 생산 확대 지원

자료 : 농림축산식품부(2014.10.28.)

□ 개요

- [농식품부, 2014/2015 밀·보라·조사료 등 동계작물 재배확대 적극 지원] 국제곡물 가격 상승 대응, 경지이용률 제고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
 - ※ 경지 이용률: (1980) 125.3% → (2013) 101.1, 24.2%p↓
- (전략) 365천ha(전년 동계작물 파종면적 335천ha)까지 재배면적 확대 전망, 이를 통해 밀·보라·조사료 자급률 높이고 수입곡물을 국내산으로 적극 대체
 - ※ 품목별 목표: 보리(30천ha → 35), 밀(7 → 10), 조사료(298 → 320)

□ 주요 내용

- [이모작직불금 지원] 생산농가 재배의욕 고취, 2014년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내용*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후 **12월 직불금 지급**
 - ※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·접수 결과: 49천 농가 95천ha(약 382억 원)
 - ※※ (지원한도) 농업인 30ha, 농업법인 50ha, (신청기간) 매년 2.1.~3.21., (신청기관)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(사무소), 읍·면·동
- [사전 계약재배 활성화] 생산농가·농협·실수요업체와의 계약재배 활성화로 적정 생산 체계 구축, 맥류 과잉전망 시 조사료로, 조사료 과잉 시 녹비작물로 전환해 **수급안정 도모**
- [기계화율 제고 및 농작업 대행 확대] 파종 등 기계화가 낮은 분야 집중 지원해 **기계화율 제고**, 농협 농기계은행 통한 **농작업 대행 확대**로 **영농 효율화 도모**
 - ※ 농작업 면적: (2008) 7천ha → (2010) 381 → (2013) 833 → (2017p) 1,000
- [조사료 지원사업] 경종농가에서 조사료 재배 참여 용이하도록 조사료 경영체와 **연결체계 구축**하여 파종-수확-유통까지 **논스톱 서비스** 제공
 - ※ 사료작물 재배 시, 종자구입비(30% 보조) 및 사일리지제조비(90% 보조) 및 가축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과 연계해 고품질의 가축분뇨 액비살포 우선 지원 중
- [향후계획] 관계기관 대상으로 대책 추진상황 및 수급상황 주기적 점검 통해 내실화

2015년 친환경농업지구사업 27개소 선정·지원

□ 주요 내용

- [농식품부, 2015년 친환경농업지구사업 신청 접수] 친환경농산물을 생산·가공·유통하는 생산자단체에 총 27개소(개소당 5억 원) 지원 계획
 - ※ 2015년도 사업량은 국회 예산심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
- (사업대상자) 농경지가 10ha 이상 집산화되고, 참여농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
- (지원내용) 유기농업자재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·유통하는데 필요한 시설·장비와 친환경농업 교육·체험 시설 등 지원, 보조율은 80%(국고 30, 지방비 50)
- (선정 시 우대지역) 사업 효과 제고 위해 △집단화된 지역, △유통망 확충된 지역, △6차 산업화가 가능한 지역
 - ※ 국류는 50ha 이상 들녘, 원예·과수 등은 10ha 이상 집단화된 지역, RPC 또는 APC와 연계한 공동 생산·유통하는 등 마케팅전략이 탁월한 지역,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한 6차산업화가 가능한 지역 우선 선정
- [사업체계 개선] (기존) 광역친환경농업단지와 마을단위 지구조성사업으로 구분 지원 → (개선) 중소규모의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에 초점
 - (사업규모) 친환경농산물 공동 생산·유통 등에 용이한 광역단지(200ha 이상)와 마을단위 지구(10ha)의 중간크기인 50ha 이상으로 조정
 - (사업기간) 사업자가 지역의 여건 및 사업계획에 따라 1~3년 이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
 - (사업신청) 지역제한 완화하여 친환경농업이 가능한 지역에서 농업인 조직화 역량을 갖춘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실천
- [향후계획] (11월 초순까지) 지자체가 현장실사 포함한 자체심사 거쳐 우수 사업 신청자 추천 → (11월 말까지) 농식품부 전문가 심의위원회 거쳐 사업자 최종 선정
 - ※ 사업신청 생산자단체 대상으로 사업역량 및 추진 의지, 지역의 친환경농업 여건, 산지유통주체로 발전 가능성 등 3개 분야 17개 항목 평가

자료 : 농림축산식품부(2014.10.27.)

연구지원 2014년 가을배추·무 재배면적

자료 : 통계청(2014.10.30.)

□ 개요

- [조사목적] 농산물수급안정 계획 수립,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
 - ※ (조사대상) 농업면적조사 표본조사구 21,900여개 현지조사(공통표본 21,600여개, 주산지표본(가을배추·무) 300여개) / (조사기간) 2014.9.20.~10.4.

□ 주요 내용

- [2014년 가을배추 재배면적] 15,233ha, 전년(15,095ha)대비 0.9% 증가
 - (원인) 2013년 생산량 증가로 가격 하락한 반면,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와 절임배추 수요증가, 일반배추에 비해 가격이 안정적인 절임배추 수요증가로 대체작물인 가을무에서 가을배추로 전환
 - ※ 가을배추 가격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, 도매, 상품 1kg, 11~12월 평균): (2010) 1,063원 → (2011) 339 → (2012) 951 → (2013) 528(-423원, 44.5%↓)
 - ※ 배추 가격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, 도매, 상품 1kg, 분기별 평균): (2013.1분기) 1,231원 → (2분기) 782 → (3분기) 1,074 → (2014.1분기) 410 → (2분기) 361 → (3분기) 724
 - (시도별) 전남(4,003ha) > 충남(1,868ha) > 경북(1,785ha) > 전북(1,728ha) 순*
 - ※ 4개 시도 면적: 전국의 61.6% 차지
- [2014년 가을무* 재배면적] 5,498ha, 전년(7,532ha)대비 27.0% 감소
 - ※ 가을일반무: (2013) 6,706ha → (2014) 4,977(-1,729ha, 25.8%↓)
 - ※ 가을총각무: (2013) 826ha → (2014) 521(-305ha, 36.9%↓)
 - (원인) 2013년 생산량 증가로 가격 하락, 2014년 약세가 이어지면서 가을무 재배면적 큰 폭 감소, 가을무 주산지에서 대체작물인 가을배추·대파로 전환
 - ※ 가을무 가격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, 도매, 상품 1kg, 11~12월 평균): (2010) 1,058원 → (2011) 328 → (2012) 757 → (2013) 468(-289원, 38.2%↓)
 - ※ 무 가격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, 도매, 상품 1kg, 분기별 평균): (2013.1분기) 550원 → (2분기) 709 → (3분기) 751 → (2014.1분기) 421 → (2분기) 481 → (3분기) 545
 - (시도별) 전북(1,231ha) > 경기(1,013ha) > 충남(985ha) > 전남(815ha) 순*
 - ※ 4개 시도 면적: 전국의 73.6% 차지

WTO, 「세계 무역 보고서 2014」 발표

□ 개요

- [WTO 사무국, 「세계 무역 보고서 2014*(부제: 무역과 개발 관련 최근 동향과 WTO의 역할)」 발표, 10.20.] 개발과 관련된 세계 무역의 추세, WTO의 역할에 대한 분석 제시
 - ※ 「World Trade Report 2014」 Trade and development: recent trends and the role of the WTO
- (발리 패키지* 이행이 개발의 모멘텀 지속 위해 중요) WTO 사무총장 호베르토 아제베도(Roberto Azevêdo), 무역이 개발의 핵심요소이며, DD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이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
 - ※ 제9차 WTO 각료회의(2013.12.)에서 '발리 패키지' 협상 최종 타결: ①무역원활화, ②농업, ③개발·최빈개도국 3개 부문에 걸쳐 10개의 합의문 채택
- [평가] WTO가 그간 개도국의 무역 증진과 개발에 기여, UN 새천년 개발목표(MDGs)달성 위해 WTO 다자 체제의 진전이 가장 유효

□ 주요 내용

- [2013 세계 무역·경제 동향] 세계 무역 성장률 2.2%(2012년 2.3%), 지난 20년(1993~2013)간 연평균 무역 성장률 5.3% 하회, 유럽의 경기침체·高실업률,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기인
 - ※ 세계 수출 성장률: (2011) 5.5% → (2012) 2.4 → (2013) 2.5
 - ※ 세계 수입 성장률: (2011) 5.3% → (2012) 2.1 → (2013) 1.9
- [2013년 세계 GDP 성장률] 2.2%, 세계 무역성장률과 동일, 과거 수십 년 간 유지되어온 세계무역과 GDP 성장 간의 2:1 관계가 유효하지 않은 양상
 - ※ 세계 GDP 성장률: (2011) 2.8% → (2012) 2.3 → (2013) 2.2

〈한국 관련 통계〉

- 1인당 GDP(2011년): 27,522달러, 지난 21년간 2.6배 상승
 - G20 개도국 중 1인당 GDP 순위: (1위) 한국, (2위) 사우디아라비아, (3위) 러시아
 - ※ G20 국가 중 개도국(11개국): 한국, 중국, 인도, 아르헨티나, 브라질, 러시아 등
- 중국대만 등과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가장 크게 증대

〈무역과 개발 관련, 세계 무역 4대 추세〉

- [1.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개도국의 위상 증대] 2000년 이후 선진국의 1인당 GDP는 연평균 0.9% 성장한데 비해 개도국은 4.7% 성장하여 선진국·개도국 간 소득격차 축소
 - ※ 1인당 GDP 성장률: 선진국 (1990년대) 2.9% → (2000년 이후) 0.9 / 개도국 (1990년대) 1.5% → (2000년 이후) 4.7
- (개도국은 세계 생산과 무역의 절반 차지) 개도국 비중: 세계생산 (2000) 39% → (2011) 51 / 세계무역 (2000) 32% → (2011) 47
- [2. 글로벌 가치사슬*(GVC, Global Value Chain) 부상] 선진국·개도국간의 GVC를 기초로 한 교역은 정체상태이나, 개도국 간 GVC 네트워크의 중요성 증대 추세**
 - ※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원재료, 노동력, 자본 등이 여러 국가에서 결합돼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의미
 - ※※ 개도국 간 GVC관련 교역 비중: (1988) 6% → (2013) 25
- (개발이의 위해 디자인 등 상위 단계로 도약 필요) GVC는 세계경제에 낮은 비용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기회 제공하나, 조립생산 단계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은 낮은 수준
- (개도국의 GVC 참여를 제약 요인* 극복) WTO 「무역을 위한 원조」 프로그램 통한 지원 중요
 - ※ 제약요인: 운송비용, 통관절차, 수입관세, 허가요건, 인프라, 무역금융, 표준 등
- [3. 개발 전략에 있어 1차 상품의 역할] 지난 10년간 금속·광물 가격지수는 2배 이상 증가, 농산물 가격은 약 2배 상승, 당분간 가격 수준이 높게 유지될 전망
 - (개도국 농업은 고용·생산·소비 측면에서 중요한 입지) 농업 생산성 향상이 개발 전략 수립에 핵심
 - ※ 2000년~2012년간 가격기준 농산물 수출 3배 ↑, 물량기준 농산물 수출 60% ↑ → GVC 참여 통한 농업생산성 증진은 개도국들의 개발에 기여 가능
 - (새로운 시장 공략, 생산전략 수립) 농업 무역의 추세 변화에 따라 가공농산물 등 새로운 시장 공략, 생산전략 수립할 필요성
 - ※ 총 농산물 수출에서 가공농산물 수출은 60% 비중 차지
- [4. 거시경제 충격의 동조화 및 세계화 증가] 지난 2008년 세계 경제가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, 다자 무역 규범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저지
 - ※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거시경제적 취약성이 큰 상황이나, 국제공조 대응 노력이 더욱 중요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(2014.10.27.)

현장여론 농업 보조금 활용 실태 및 개선 방안

자료: KRE리porter를 대상으로 장익정보실 자체 조사

□ 조사 개요

- 수집기간: 2014. 10. 1. ~ 10. 31. (총 28건)
- 수집대상: KRE리porter
- 수집방법: 온라인사이트, 이메일, 팩스, 우편 수집

□ 농업 보조금 활용 실태 및 개선 방안

- 농업 보조금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농업기반 구축,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계속 보조금 제도는 유지, 확대 필요<오형동, 전남 해남>
- 양파종자를 보조 받아 구입해 농사지어 당해 양파가격이 폭락해 수확하지 않고 트랙터로 밭을 갈아엎는 상황에서 또 **보조금이 지원되는 등 농업 보조금의 이중 지원이 많아 농업 보조사업 개선 시급**<김정오, 경남 거창>
- 보조받아 구입한 농자재를 무용지물로 방치해 두거나 판매상에게 원가 이상의 가격으로 처분하는 경우도 있어 정기적으로 보조금 활용 실태를 점검해 **보조 농자재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고 부당사용을 줄이도록 권고**해야<변해동, 강원 홍천>
- 열악한 농촌 현실에 농업 보조금 지원은 긍정적이나 보조금을 탐내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남용이 많고 수혜 양극화가 심각한 실정. 오히려 신용불량자가 발생하거나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보조금으로만 사업을 추진한 부실 사업체가 발생하기도...**유통정보교육 등에 보조금 지급하고 생산과 관련된 지원은 저리 용자로 전환**해 성실한 농업인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 요망<이봉용, 충남 공주 외 1>
- 최근 **영농조합 형태의 법인에 보조 사업이 편중되어 그 부실함이 심각한** 실정. 전면적인 조사와 감사 실시, 경영실태 점검 통해 비농업의 수혜 방지 및 남용 축소해야 할 것<임충빈, 경기 안성 외 1>
- 농업 보조금은 마땅한 사업을 엄선집행하고 사업 진행과정을 살펴 **당초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게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사업관리를 포함해 감독·운영**해 나가야 함<유영조, 강원 영월 외 1>

- 보조금의 부정 수급, 부적절한 분야 지급, 대상자 선정의 불공정성 등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**다양한 의견 수렴이 우선시 되어야** 하며, 이를 반영해 올바른 보조금 집행 추진 요망<전연수, 경남 의령 외 2>
- 정부에서 농림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개인에게는 지원범위가 작아 법인을 설립으로 보조받는 비중이 큰 편. **개인이나 법인의 구분 없이 사업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및 활용범위 개선 요구**<오형동, 전남 해남>
- 농가에서 꼭 필요한 보조 사업이 무엇인지, 필요한 인원은 어떠한지 수요조사를 실시해 헛되이 쓰이는 것 없이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<김현자, 경남 밀양>
- 귀농교육 수료증 몇 개만 있으면 역대 지원을 받아 사업할 수 있는 제도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귀농인이나 비농업인이 보조금에 욕심내어 무작정 사업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...**전업농 보다 성공률이 낮은 귀농인에게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는 현 보조금 제도 개선 시급**<김용덕, 경기 남양주 외 1>

□ 기타 현장여론

-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요원, 구급요원, 안전시설 등 안전강화도 좋지만 농촌에 요구사항이 지나치게 많아져 농촌관광에 또 한번 위기<변해동, 강원 홍천>
- 내년도 마을사업 계획해야 할 시기에 10월 초 전국적인 지역축제로 떠들 썩... 시기 조정이 좋을 듯<변해동, 강원 홍천>
- 적은 노동력과 편의성을 우선 고려해 지력 약화는 뒷전이고 쉽게 다수확 하려다가 과다한 시비와 농약 남용 등 근시안적인 농사 늘어...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건전한 토양, 생태계 순환이 정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지속농업 실천해야<김인남, 경북 상주>
- 농산물 생산과 소비에 대한 데이터 구축 통해 폐기농산물을 줄이고 늘어나는 FTA체결에 따른 대책마련 시급<이익영, 경기 안산>
- 매년 발생하는 유해 조수 피해에 대해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보상 요건대로 집행하다 보니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재점검 필요<정화려, 충북 단양>

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기획조정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.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